

보 도 해 명 자 료 (13. 10.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野 “전력수급계획 재별에 특혜, 감사청구 검토”
기사에 대한 입장 (13.10.27, 연합뉴스 등)

1. 기사 내용

□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부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6차 수급 계획에 대해 부실 재별 특혜, 주먹구구 전력수급계획이라고 비판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(1-1) 밀양 송전탑 사태 겪고도 송배전계획이 누락된 발전소 수급계획에 편입.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 발생 우려로 전력수급 차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

□ 한전이 6차 송배전설비계획에 동부하슬라, 영흥 등 4개 송전선로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밀양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사업자와의 추가협의를 필요했기 때문임

○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한전은 4개사중 2개사에 대해서는 계통연계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,

- 나머지 2개사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

□ 또한, 과거 전력수급계획과는 달리 6차 계획에서는 송전선로 연결여건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(12점→25점)하여 상대적으로 계통연계가 용이한 발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,

○ 예상치 못한 송전선로 및 발전소 건설지연 등에 대비하여 건설 불확실 물량(전체 화력 1,580만kW 중 390만kW)을 추가로 반영하여 만약의 경우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음

(1-2) 부적합한 입지로 인해 계획대로 전력수급에 참여하기 어려운 발전소 생산 전력을 수급계획에 포함

□ 송전선로 연결 문제는 단순히 변전소까지의 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더욱 중요

○ 변전소와 원거리에 위치하면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, 전체 계통망의 기술적인 안정성 관점에서는 송전선로 거리가 길어도 계통여건이 유리한 지역이 존재

* 즉, 신규 발전기 연계시 과부하(인근 공용망 용량 초과), 고장전류 초과(사고발생시 확산 가능성), 발전기 탈락(송전선로 고장시 발전기 정지)이 발생한다면 계통여건이 훨씬 불리한 지역임

□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통여건이 유리하나 비교적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지역은 경과지 선정에서 건설공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사전에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

(1-3)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8기 생산전력이 수급계획에 포함

□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는 원안위 등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력수급 계획에서 일률적으로 재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미리 가정할 수 없음

□ 또한, 일률적으로 재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타 발전 설비를 반영하여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면 추후 재가동 승인시 과잉설비 문제가 발생

(2-1)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4.4%를 대기업이 장악하여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

□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**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** 수급안정을 위해 민자 필요

- 6차 계획에서 '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,580만kW였으나 **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**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음

□ 민간사업자 반영은 2001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발전시장 개방에 따른 것으로 **6차 계획에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,**

-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(8개사 중 5개사)가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

(예) 삼성-남동, 동양-중부, SK건설-남동, 동부-서부 등

(2-2) 석탄화력 사업자 선정은 천문학적 특혜이며 발전소 삼절 한번 안하고 사업허가만으로 회사가치가 20배 뛰는 현상 발생

□ '12.5월 민간석탄을 정산조정계수 대상에 편입하였고, '13.3월 민간 LNG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민간발전에 대한 적정수익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

□ 전력수급계획 반영 이후에도 발전소 건설의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건설과정에서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바, 수급계획 반영만으로 천문학적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됨

- 또한, 20배 급증 주장도 시장에서 검증되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없음

(2-3) 사업자 선정에 장관 등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돼 정권 입맛에 맞는 일은 해온 재벌이 허가받았음

□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

-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**평가기준에 따라 엄정**하게 평가하였고,

-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음

(2-4) 연이은 부실 재벌 석탄화력발전 허가, 먹튀논란과 국부유출 논란까지 야기

□ 민간발전사업자의 먹튀논란 등은 오릭스의 STX에너지 인수 등으로 최근 발생한 문제로서,

- 발전사업 허가 후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해 정부는 변경인가제도 등 타 산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

(3-1) 산업부는 6차 계획의 부실수립 책임을 물어야 하며 빠른시 일내 동 계획의 전면수정이 이루어져야 함

□ 6차 계획은 '13~'27년간의 전력수급계획으로 **현재의 전력난과 관계가 없음**

- 오히려, 수요 과소예측, 발전설비 건설지연 등 과거 수급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래에는 전력난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예비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수립한 계획임

< 참고 > 최근 전력난의 원인 분석

- 최근 전력난의 원인은 '06년 수립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를 과소예측하고 수요관리량을 과다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
- 3차 수급계획 설비물량 과소계상에 의한 중단기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차('08년), 5차('10년) 수급계획 및 간년도 계획에서 긴급설비 투입 등 최대한 대응하였으나,
 - 발전소 건설에 최소 5년이 소요되는 만큼 수급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음
- 또한, 이번 여름 전력난의 원인이 된 원전의 경우도 문제되는 케이블은 '04.7월 계약을 체결하고 '08.2월(신고리#1,2) '09.3월(신월성#1)에 설치

☐ 최근 반복된 전력난에 대해 **산업부의 책임은 통감하나,**

- 새정부는 원전비리 등 **과거정부로부터 누적된 전력난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**하기 위해 노력 중
 - 유착관계 근절, 구매투명성 제고, 품질관리 강화 등 **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마련**하는 한편, 분산형전원 확대,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등 **전력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나가고 있음**

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**2년마다 수정·보완**하는 성격의 계획으로,

- 6차 계획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내년에 수립하는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할 것임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2-2110-4897), 성 시내 사무관(5529)